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심의 · 의결

의 안 번 호 제2023-006-050호

안 건 명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의 결 연 월 일 2023. 4. 12.

주 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3,6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 유

I. 피심인의 일반 현황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 피심인의 일반현황 >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소	직원 수

II. 사실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신고 건과 관련하여 피심인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22. 9. 5. ~ 11. 30.)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1.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현황

피심인은 공지사항 알림, 가정통신문 발송 등을 위해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22. 10. 31.기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다.

개인정보 파일 (시스템)	수집·이용 항목	목적	수집 방법	수집일	보유 기간	보유건수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1) 유출규모 및 항목

- (유출규모) 회원에 가입한 교사 등 1,070명의 회원정보
- (유출항목) 성명, 휴대전화번호, 학년·반·출석번호, 직원·교원·강사 여부

2) 유출경위

졸업생(민○○)이 개인계정으로 시스템에 로그인한 후 이○○ 교사의 이름으로 피심인 운영관리자에게 교직원의 접근권한을 요청하였고, 그 권한을 부여받아 회원정보(교사, 학부모, 학생)를 조회하고, 3회에 걸쳐 시스템에서 문자를 발송하였다.

3) 유출경과 및 대응

일시	피심인의 유출인지·대응 내용
'22. 3. 7. 10:29	졸업생(민○○)이 개인계정으로 시스템 로그인 후 이○○ 교사의 이름으로 운영관리자에게 교직원 권한 요청
'22. 3. 7. 14:03	운영관리자는 확인 없이 교직원 권한을 승인
'22. 3. 7. 14:30 ~ 3.10 08:51	졸업생(민☆☆), 학생 회원정보 조회 및 문자 작성·발송
'22. 3.10. 08:19	학부모들의 제보로 유출사실 인지
'22. 3.11. 11:00	교직원 권한요청 방식 개선
'22. 3.11. 22:16	정보주체에게 유출 통지(문자)
'22. 3.12.	개인정보 유출신고 및 유출사실 게재

다. 기초 사실

1)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운영관리자 및 교사 권한으로 외부에서 관리자페이지에 접속할 경우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2.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 2. 6.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023. 2. 24.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제2호)’,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제4호)’ 등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이하 ‘고시’) 제6조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가상사설망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거나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시 제8조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오·남용,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이 운영관리자 및 교사 권한으로 외부에서 관리자페이지에 접속할 경우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 고시 제6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피심인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지 않은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 고시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 피심인의 위반사항 >

위반행위	법률	시행령	세부내용(고시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접근통제)	보호법 §29	§30①	외부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안전한 접속수단이나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은 행위(고시§6②)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접속기록)	보호법 §29	§30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을 월 1회이상 점검하지 않은 행위(고시§8②)

IV.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 총 600만원을 적용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자. 법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제28조의4 제1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6호	600	1,200	2,400

나.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의 가중)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하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과태료의 가중)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동 지침 [별표2]의 가중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과태료 가중) [별표2] 가중기준에 따라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2개인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10%인 60만원을 가중한다.

< 과태료의 가중기준(제8조 관련) >

기준	가중사유	가중비율
위반의 정도	1. 제3호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3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금액의 50% 이내
	2. 제3호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2개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금액의 30% 이내

다.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동 지침 [별표1]의 감경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과태료 감경)에 따라 의견제출 기간 내 법규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자료제출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50%인 300만원을 감경한다.

< 과태료의 감경기준(제7조 관련) >

기준	감경사유	감경비율
조사 협조 자진 시정 등	1. 과태료의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간 내에 법규 위반행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경우	기준금액의 50% 이내
	2. 보호위원회의 조사기간 중에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기준금액의 40% 이내

※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과태료의 감경기준)에 따라 과태료의 감경은 기준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 가중·감경을 거쳐 총 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처분의 근거		과태료 금액 (단위:만원)			
위반조항	위반내용	기준 금액(A)	가중액 (B)	감경액 (C)	최종액(D) D=(A+B-C)
법 §29	안전조치 의무 위반	600	60	300	360

☞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V.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 제6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2023년 4월 12일

위 원 장 고 학 수 (서 명)

부위원장 최 장 혁 (서 명)

위 원 강 정 화 (서 명)

위 원 고 성 학 (서 명)

위 원 백 대 용 (서 명)

위 원 서 종 식 (서 명)

위 원 염 홍 열 (서 명)

위 원 이 희 정 (서 명)

위 원 지 성 우 (서 명)